

“오로라 프로젝트로 HEV 이어 BEV까지 친환경차 사활”

〈하이브리드〉

〈전기차〉

인터뷰 르노코리아자동차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



르테판 드블레즈 르노삼성자동차 신임 대표이사(가운데)가 10일 르노테크놀로지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

“친환경차 시장의 혁신을 이끌 신차 프로젝트인 ‘오로라(Aurora, 여명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 대표이사(사장)는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시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미래 모빌리티 개발 방향과 전략을 설명했다.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는 르노디자인아시아센터와 함께 르노-닛산얼라이언스가 한국서 운영 중인 아시아 연구·개발(R&D) 거점이다.

지난 3월 르노코리아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드블레즈 사장은 “2021년이 어두운 시기였다면 오로라 프로젝트가 본격 궤도에 오르는 2026~2027년에는 태양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 최우선 과제는 르노그룹과 길리그룹을 좌우에 두고 오로라 프로젝트를 성공키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로라 프로젝트는 르노그룹의 디자인 역량과 지리홀딩스스웨덴 R&D 센터 기술력의 융합을 통해 기존 내연자동차 생산에서 미래자동차 생산 시스템 변혁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지리홀딩스 산하 볼보의 공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2024년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에서 하이브리드(HEV)

내연차-미래차 생산시스템 변혁 XM3 HEV 등 친환경차 개발집중 2024년 부산공장 HEV 생산·출시 2026년부터 순수 BEV 출시 목표

차량 국내 생산 출시를 추진하는 오로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은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HEV가 주목받고 있다”며 “중국의 경우도 6~7년 동안 전기차(BEV)만 강조했는데 이제는 HEV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EV기술이 고도화되기 전까지 CO2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차량이 HEV다”고 덧붙였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BEV 기술 개발에 집중함과 동시에 올 하반기 XM3 HEV 모델을 국내 출시하며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또 볼보 CMA 플랫폼 기반의 친환경 신차 개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가 공유하는 볼보CMA 플랫폼은 내연기관·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전기차(PHEV)는 물론 순수전기차(BEV)에도 적용 가능해 뛰어난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

그는 “우리는 2008년부터 HEV 개

발을 시작해 연구만 10년을 넘게했다”며 “올 하반기 출시하는 XM3 HEV에 대한 내부 기대감이 높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MA 플랫폼 도입과 관련해 “한국 시장은 D와 E 세그먼트가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큰 플랫폼이 없다”며 “CMA 플랫폼을 적용한 신차는 한국뿐만 아니라 큰 차량을 선호하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D세그먼트는 중형차, E세그먼트는 준대형·대형차를 말하기 때문에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신차는 중형급 이상 친환경차일 가능성이 높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HEV 차량을 중심으로 내수와 수출을 강화한 뒤 2026년부터 순

수 BEV를 선보일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쟁 업체 대비 BEV 출시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는 “2026년 한국 시장의 전기차 비중은 전체의 20% 정도로, 나머지 80%는 여전히 내연기관차일 것으로 전망돼 전혀 늦은 시점이 아닐 것”이라며 “르노그룹에 BEV 개발 관련 제안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안건이 수락되면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본격적인 BEV 개발 여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드블레즈 사장은 길리그룹이 르노코리아 지분에 34.02%나 참여한 것에 대해선 “경영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드블레즈 사장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많은 논의를 했다. 절대로, 어떤

형태로도 길리는 경영권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서 “길리가 볼보, 폴스타, 스마트 등과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맺을 수 있었던 배경은 경영권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길리는 기존 르노그룹, 삼성카드와 더불어 주주이사회(BoD·Board of directors)로는 참여하지만 경영진(E·Executive Committee)으로는 합류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부산공장 외에 다른 국내 사업장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드블레즈 사장은 “부산공장을 제외한 제2공장 계획은 없다”면서 “한국 자동차 시장 규모가 연간 150만대로 우리는 내수의 경우 10%(15만대)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수출까지 고려하면 최대 25만~30만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름값 급등에 불비는 셀프주유소 연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한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려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은 올해 1월 1일에 비해 각각 27.1%와 43.1% 급등했다. /뉴시스

중소, 원재료값 폭등에 애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해야

중기중앙회, 제조사 209곳 조사 원재료값 인상에도 제값 못 받아

중소기업 상당수는 최근의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대비 2021년 현재 원재료 가격이 47.6%나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일감을 주는 원청기업이 올려준 납품단가는 평균 10.2%에 그쳐 경영에 치명타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09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해 1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67%)를 선택했다. 그다음으로는 ‘기업간 자율협약’(19.6%),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11.5%)로 파악됐다.

바람직한 연동제 방식으로는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강제화)’이 55%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기업간 자율적시

행’은 33%, ‘모르겠다’는 8.6%였다.

이런 가운데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7%에서 4.7%로 줄었다.

구체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실행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급원가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응답도 38.8%였다.

자체 감내가 가능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3~5% 구간’이 가장 많았다. 특히 5%라는 응답이 36.4%로 조사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연동제 실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연동제를 미이행한 기업에게는 시정명령(43.5%), 과태료 또는 과징금(23.9%)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발의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bada@

“韓 IPEF 참여시 GDP 최대 40조 증가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유턴기업 지원 등 정책 뒷받침 돼야

한국의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2%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1910조 7450억원)를 기준으로 최대 40조1256억원이 늘어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IPEF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경제협력체를 이뤄 중국을 배제한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경우 단기적으로 ▲우라늄

을 포함한 광물 ▲원자력을 포함한 광물 ▲리튬 및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를 포함한 광물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통신 등 전략산업 5대 품목의 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한국 경제에 있어 부정적 측면이다. 한경연은 이 경우 0.31~0.45%가량 GDP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역내(域內)시장 진출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고 노동과 자본의 고도화, 기술혁신 등이 수반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최소 1.53%에서 최대 2.12%까지 GDP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연은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수출 규제를 확대할 경우 최대 1.61%의 GDP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한경연은 이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적절히 대비할 경우 GDP는 최대 1.17%(22조3557억원)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예상했다.

/양성운 기자